

“현대중공업, 오로지 정몽준·정기선을 위해”

현중지부 대주주 정씨 일가 탈법 승계·사익편취 제기 ... “재벌 편법세습 방지법 필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3월 23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빌딩 앞에서 ‘현대중공업 탈법 재벌승계·사익편취 경영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경영권 세습을 위해 현대중공업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정몽준·정기선 대주주 부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정씨 일가에 대해 ▲기업분할 이후 대주주 정씨 일가 지분 2배 이상 증가 ▲지주사 무리한 고액 현금배당 유지 ▲현대오일뱅크 지주사 편입과 상장추진 방식 의혹 ▲현대글로벌서비스 지분 38% 매입한 사모펀드 KKR 전체 등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사측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기업분할을 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가장 위에 현대중공업지주가 있다. 기존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리로 쪼개졌다.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신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 속해 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대주주인 정몽준 현대중공업 전 회장은 2017년 기업분할 당시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각해 지주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몽준 전 회장의 지분율이 10.15%에서 25.5%로 늘었다.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두 배 이상 늘려 확보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주주 정씨 일가 지분이 늘자 현대중공업지주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2,800억 원을 현금 배당했다. 2020년 영업 손실 5,97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가 났지만, 고액 현금배당을 무리하게 유지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에 속해 있던 현대오일뱅크를 2

조 원 가까이 되는 부채 이자도 제대로 환수하지 않은 채 지주사에 편입시킨 그룹 사측 처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조선산업 위기 때 현대오일뱅크를 상장했다면, 현대중공업 현금흐름이 나아지고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경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분리 과정을 시작으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에서 정기선 부사장 승계를 위한 편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탓에 현대중공업 단체 교섭이 장기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경근 지부장은 “24일 한국조

선해양, 25일 현대중공업지주 주주 총회에 앞서 주주와 국민에게 현대중공업 정씨 일가의 탈법 행태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조경근 지부장은 “현중은 현대오일뱅크를 현대중공업지주에 집어넣은 뒤 5,800억 원을 현금배당하는 등 지주사 수익을 높여 대주주 일가의 배를 더 불려줬다”라며 “현중은 오직 정기선 승계와 정씨 일가 사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근 지부장은 “대주주 일가가 회사 공간을 쑥쑥 빼먹는데, 사

측은 돈이 없다며 단체교섭을 2년 넘게 끝내지 않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삭감, 임금 체불, 고용불안을 일상에서 겪고 있다”라며 “단체교섭을 하루빨리 정상 마무리하고 원하청 노동자들 일한 대가를 제대로 달라”라고 강조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정기선 승계 탈법은 역대 최악이다. 기업이 오직 정기선을 위해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은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영업

대표 등 직책을 갖고 현대중공업그룹 경영권 승계를 노리고 있다.

김용화 수석은 재벌의 탈법승계를 막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현대중공업 자본이 3세 세습하려고 노동자와 주주를 기만하고, 회사를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썩소리도 못한다”라며, “정기선 방지법이 시급하다.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탈법 재벌승계 방지를 위한 법 제정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원청 직접고용 쟁취

해고 725일 만에 현장으로 ... “청원경찰 직접고용 핵심 요구 관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26명의 청원경찰 해고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해고 725일 만이다.

지회와 분회는 3월 23일 “이번 합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는 핵심 요구를 실현했다는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사는 기간제법을 고려해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되, 법원 판결이 2년 내 확정되지 않을 시 새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지회와 분회는 대우조선에 직접 고용된 청원경찰 신분으로 남은 법률투쟁에 적극 대응하며,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을 법제화하는 투쟁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9년 초 대우조선 하청업체 웰리브는 경영상 이유로 청원경찰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거부하자 같은 해 4월 1일로 해고했다.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은 대우조선 해양보안분회를 세우고, ‘청원경찰 사용자는 청원주인 대우조선이고, 이 해고는 대우조선의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 임용은 공법상 행위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형성하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대우조선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은 중노위 판정을 뒤집어 대우조선이 청원경찰의 사용자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조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분회는 승소 판결 직후 투쟁 수위를 올렸다. 분회는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한다”라고 선포하고, 대우조선 서문 앞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분회는 2월 24일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 삭발하며 끝장투쟁을 결의했고, 3월 15일 끝장 단식투쟁을 예고했다. 3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면서 단식투쟁을 연기하고 교섭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50m 꼭대기 농성

현중사내하청지회, 불법과건 해결 촉구 고공농성 ... “진짜 사장 정기선 만나자”

전영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과 이병락 지회 대의원이 3월 22일 오전 7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맞은편 호텔 라한(구. 현대호텔)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50m 높다.

서진ENG 해고노동자인 이병락 지회 대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3월 22일 오늘로 천막농성 236일을 맞았다. 서울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등 전국 거점 노숙 농성도 펼쳤다”라며 “240일 가까이 우리 요구를 외쳤지만,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건설기계 사측은 귀를 막은 채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왔다”라며 고공농성 돌입 상황을 전했다.

이병락 대의원은 “현대건설기계 원청이 우리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금속노조는 이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소송도 시작했다. 정규직 노동자로 현장 복귀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현대건설기계 직접고용 대상자인 현중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7명은 지난 3월 8일 현대건설기계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임금 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전영수 지회 사무장은 현대건설기계 불법과건 문제와 함께 현대중공업그룹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지적했다.

전영수 사무장은 “현대중공업그룹 사측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 귀향비와 여름 휴가비를 도둑질해갔다”라며 “정규직 노동자와 밥값도 다르다. 원청의 기성 단가 후려치기로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체납도 빈번하다”라고 설명했다.



전영수 지회 사무장은 “곧 열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3대 세습 자금 마련을 위한 배당금 잔치를 벌일 텐데 결국 그 부담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올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자본은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 쥐어짜기로 제 잇속만 차리는 불법정영을 이어나갈 참인지 정말 답답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영수 사무장은 “현대건설기계 불법 과건과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사장 정기선을 꼭 만나야 한다”라며 “원청이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와 노동자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는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ENG의 위장폐업을 규탄하며,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진ENG는 2020년 5월 금속노조와 단체교섭 중 돌연 지회에 폐업을 통보했다. 사측은 같은 해 8월 폐업을 강행했고, 모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지회는 서진ENG가 갑자기 회사를 문을 닫을 이유가 없으며, ‘노조 파괴용’ 위장폐업으로 판단한다. 지회 조합원인 서진ENG 노동자 27명은 지난해 7월 30일 현대건설기계 모그룹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회는 농성을 진행하며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불법과건 진정서를 접수했다. 현대건설기계 원청은 도급계약을 맺은 서진ENG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를 해 왔다.

노동부는 같은 해 12월 불법과건 판정을 내리고, 현대건설기계에 서진ENG 노동자들을 올 1월 28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통보했다.

현대건설기계 사측은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천만 원 납부를 사전통지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기계를 과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